

보 도 자 료

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	▪ 2021. 10. 18. (월) ▪ 총 3 쪽	
	▪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자	성과확산팀 전태윤 팀장(☎02-3460-5112) 성과확산팀 정소원 행정원(☎02-3460-9237)

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-한국민사법학회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
- ☐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(원장 하태훈)은 2021년 10월 18일(월),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한국민사법학회(회장 김천수)와 ‘민사법무 분야의 연구·학술·교육 분야 상호교류 협력 체계 구축’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- ☐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과 홍영오 기획조정실장, 장다혜 기획팀장, 한국민사법학회 김천수 회장, 박수곤 총무이사, 정상현 사업이사가 참석했다.
- ☐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 연구원의 명칭변경 이후,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민사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앞으로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은 민사법무·상사법무·국가송무 등 법무정책 전반의 학제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☐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△민사법 분야의 공동연구과제 수행 △학술행사 공동개최 △연구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민사법무 정책연구 지원과 양 기관의 연구능력 향상 등을 합의했다.
- ☐ 하태훈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장은 “한국민사법학회와의 업무협약은 연구원이 지향하는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

있는 일이다.”며 “향후 가구형태, 가족개념, 주거 및 상가 임대차, 반려동물 등 실태조사를 통해 민사법적 쟁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, 민사법무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□ 김천수 한국민사법학회장은 “현재 한국민사법학회의 주요 관심 주제가 ‘민법학 살리기’인데, 이번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이 민법학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”며 “민법과 형법 분야가 둘로 나뉘어서 각자 발전해 왔지만, 향후 학제간 융합을 통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자로 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’이 발효됨으로써, ‘한국형사정책연구원’에서 ‘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’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. 연구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연구기능 확대를 통해 사법 및 법무정책연구기능을 확대하여 형사영역에 더하여 법무부의 주요 기능인 민·상사·국기송무·출입국관리 및 난민정책, 법조인력·통일법무·국제법무 관련 법무정책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기능의 취약성을 해소하여 주요 정부유관부처의 주된 임무 수행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별첨.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-한국민사법학회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



(좌측부터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기획팀장,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홍영오 기획조정실장,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, 한국민사법학회 김천수 회장, 한국민사법학회 박수곤 총무이사, 한국민사법학회 정상현 사업이사)